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8/ 24 통권 1585호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리더, 전쟁승리보다 전쟁예방해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개인사업자의 은퇴·폐업시 주의할 세금·회계문제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주된 납품계약에 대해, 별도 하청업체가 제공한
정비용역은 주된 재화의 부수용역 아님 (p.12)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지상권 등, 문화예술권 등, 강연료 · 그림 등의 법정필요경비〉

연도	법정필요경비율	규정	변경이유, 과정 등
2017년까지	80% 또는 실제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일시 · 우발적 소득, 소득창출이 어려움
2018년	70% 또는 실제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신설	80→70% 내림, 괄호()내에 2019년부터는 60%로 기재
2019년	60% 또는 실제비용	그대로임 (일부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 추가 (통신판매 · 중개 위한 물품, 장 소대여료 포함)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60% 또는 실제 초과비용	그대로임 (일부 개정)	· 산업재산권, 다수강연료 등 · 소득창출 어려움 감안 유지 · 특허 · 재산권, 바이오 등 입증 불능한 장기간 비용 많음
서화 ·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	1억원까지는 90%, 1억 초과시 : 9천만원 + 80% (10년 이상 보유는 9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미술산업 지원 개념
종교인 소득	2천만원까지 80% + 초과 2천 50% + 초과 2천×30% + 6천만 만 초과시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종교인 근로소득의 특별혜택 과세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85호 / 주간 34호

2022. 8. 24.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광업권 등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지상권 등, 문화예술권 등, 강연료·그림 등의 필요경비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개인사업자의 은퇴·폐업시 주의할 세금·회계문제	2
C E O 에 세 이	리더, 전쟁승리보다 전쟁예방해야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문의입니다	5
	- 공동사업자 소득월액 보험료	6
	- 일비 지급	
	- 산업재해보험료 계산서발행 가능여부	
	- 의제매입 업체 관련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9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10
직 장 인 Survival	인간관계 달인이 되는 5가지 법칙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비용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6678, 2021.12.29)	12
	-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재산-4357, 2022.01.19)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호우피해 납세자 납부유예 '최장 9개월'... 진행 중 세무조사도 중단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주된 납품계약에 대해, 별도 하청업체가 제공한 정비비용은 주된 재화의 부수용역 아님	12
세 무 정 보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15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4

개인사업자의 은퇴 · 폐업시 주의할 세금 · 회계문제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 · 구분	구체적 행위, 절차, 쟁점 포인트 등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세금계산서 수수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함. 외부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도 안됨
남은 재고 정리	폐업 전에 남은 재고자산을 모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함 (폐업 후 남은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이미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 금액을 다시 납부함)
소득지급명세서	채용된 직원의 최종 급여분분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말월의 다음 달 말까지임
각종 소득명세서	폐업 전까지의 각종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함
다음연도 종소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합산신고함
포괄양수도여부	폐업사업장 · 잔여재산의 일반양도 →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 부가세 과세거래 아님(세금계산서 미발행) 상대방 사유로 포괄양수도 여부 불분명시 → 세금계산서 발행 선택해도 됨
사업상의 권리금	사업장의 재산 : 부가세 과세, 사업장의 부동산 :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형재산가치, 권리금 등 : 기타소득으로 법정경비 60% 차감 후 $40\% \times 22\% = 8.8\%$ 원천징수 차감된 후, 순액으로 지급받음(상대방은 총 취득원가로 감가상각함)

리더, 전쟁승리보다 전쟁예방해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곡물과 오일가격폭등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문제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에 각국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빌 게이츠조차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방할 수 없었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의 대가 손자(孫武)는 “훈련되지 않은 병사를 전장에 보내는 건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국가지도자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발발후 창검을 들고 나서는 것보다 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브라질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대통령은 지난 5월4일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러·우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대통령은 전쟁을 부추기는게 아니라 피하게 만들 수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로 날아가 푸틴대통령과 이야기해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목 밑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와의 근본적 갈등 원인은 뿌리가 깊다. 미국 보스턴대학의 국제관계학교수인 조슈아 R. 이츠코워츠 시프린슨박사가 2016년 5월30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나토 동진(東進)을 앞섰다는 러시아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1989년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1990년 2월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통독에 대한 협력의 댓가로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철통같은 보장’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각적으로 당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독일통일회담개시에 동의했다. 그러나 통독후 1990년대 중반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발트해국가 등이 나토에 가입하자 러시아가 격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언론과도 접촉이 있는 현재 미국의 석학으로 불리는 국제관계학의 75세 원로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교수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쟁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우전쟁의 씨앗은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때 뿌려졌다”고 봤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행정부는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푸틴과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나토가입이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적극적으로 미국을 막지는 못했다. 가장 직접적 원인은 지난해 11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디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체결한 ‘미국·우크라이나 전략적 파트너십헌장’이다.

이 헌장은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의 약속을 재천명했다. 푸틴은 “나토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침공했다는게 미어샤이머교수의 시각이다.

미어샤이머교수는 1962년 소련의 쿠바 미사일기지건설로 미·소가 대립한 군사위기를 거론하며 지금 러시아가 느끼는 존재론적 위협을 강조했다. 어렵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는 ‘협상(modus vivendi)’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문의입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 조회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당사에서 신고 및 제출해야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다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이 당사가 홈택스 조회내역보다 적을 경우)

A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액을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소득월액 보험료

Q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산입(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중 한분이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동사업의 사업소득 종합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차원에서, 추가 납부한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비 지급

Q 당사에서 일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회 출장 시, 50불로 산정하여 개인에게 지급 하려고 합니다. (급여 X)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A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험료 계산서발행 가능여부

Q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A업체와 당사와 건축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광주건물붕괴 사건으로 인해 A업체에서 건설공사중인 공사에 지진태풍홍수등에 관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A업체에 당사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청구하고자 하는데
질문1.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로 인해 VAT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A업체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해당 보험료를 귀사가 우선 납부후 A업체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입금증 주고 받으면 됩니다.

의제매입 업체 관련

Q 의제 매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복과 같은 해산물을 구매한 업체의 분류가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으로 되어있는데 의제 매입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A 면세적용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자의 업체 분류에 의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주식투자가 부동산이나 현금과 함께 중요한 재산의 구성요소를 이루게 되었으며, 또한 주식투자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식의 취득에서 매매에 이르기까지 부담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없다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은 없다. 보통 일반 개인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주식에는 취득세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납부했던 취득세를 지분비율만큼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주식의 50%를 초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회사 등에 거래수수료만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0.43%)도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가 납부하는 것이지, 취득주주는 내지 않는다.

주식거래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 부담하는데 증권사마다 약간의 수수료율의 차이는 있다.

주식보유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통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금융예금의 이자와 같이 주식에는 배당소득을 받게 되는데,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떼이게 되는데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

용된다.

다만, 소액주주로서 액면가 합계액이 1천8백천만원 이하인 장기보유(1년 이상)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조특법 §88의4).

배당소득에는 현금배당·주식배당 그리고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주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의제배당 등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는 종합합산 과세된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주권상장주식이나 코스닥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변칙적 상속 증여 방지차원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코스닥상장 2%)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 즉 대주주는 단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라도 장외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94①(3)가목 나목).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창업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최초로 출자해 3년 동안 보유한 후 양도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조특법 §14).

이렇게 주식의 양도에 있어 적용되는 세금은 주식의 종류나 거래장소 등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는데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기업 대주주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104).

상장·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의 경우는 10%(대주주는 20%, 25%)가 적용된다. 그 외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게 된다.

구 분			세 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이하 20%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초과 25%
		1년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개인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1200만~4600만원	1.5%		1400만~50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5000만~8000만원	2.4%
	8800만원~	3.5~4.5%		(현행과 같음)	
법인	2억원 이하	1%		5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	1%
	2~200억	2%		5~200억원	2%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200억원 초과	2.2%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기준

보유주택수	과세	비과세
1주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주택 임대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 보증금 혹은 전세금만 있는 경우
2주택자	모든 월세 수입	보증금 혹은 전세금만 있는 경우
3주택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하거나 해당 보증금 혹은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혹은 전세금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세액공제액		
신성장 · 원천기술	비용 × [10%(코스닥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 Min{수입금액 대비 비용 비율 × 3 또는 10%(코스닥 중견기업 15%)}]		
국가전략기술	비용 × {30%(중소기업 40%) + Min(수입금액 대비 비용 비율 × 3 또는 10%)}		
일반(① 또는 ② 중 택 일)	당기 발생액 기준 (①)	중소기업	비용 × 25% 비용 × 15%(유예기간 경과 3년 내) 비용 × 10%(유예기간 경과 3년 이후 2년 내)
		중견기업	비용 × 8%
		일반기업	수입금액 대비 비용 비율 × 1/2(2% 한도)
	증가액 기준(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비용	비용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주택가액별 취득세 변동

취득시 주택가액	취득세(기존)	개정	취득세율(%)
1억5000만원 이하	면제	0원	1
2억원	100만원	0원	
3억원	150만원	100만원	
수도권 4억원	200만원	200만원	
비수도권 4억원	400만원	200만원	
5억원	500만원	300만원	
6억원	600만원	400만원	
7억원	1167만원	967만원	1~3
8억원	1667만원	1467만원	
9억원	2700만원	2500만원	
10억원	3000만원	2800만원	3



인간관계 달인이 되는 5가지 법칙

1. 노크의 법칙 (Knock)

마음의 문을 열려면 내가 먼저 노크하라. 그리고 나를 공개해라.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까지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2. 거울의 법칙 (Mirror)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만 거울속의 내가 웃듯이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야한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3. 베품의 법칙 (Give & Take)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품어야 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짝의 법칙 (Couple)

짚신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기 마련이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친해 지려고 애쓰지 마라. 인간관계가 많다 보면 악연이 생기기 쉽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 하지말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낭만의 법칙 (Romance)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이중잣대를 버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주된 납품계약에 대해, 별도 하청업체가 제공한
정비용역은 주된 재화의 부수용역 아님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
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
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
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6678, 2021.12.29

■ 질 의

- 방위사업청은 독일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잠수함을 수입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1.7.8. 독일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잠수함 추진전동기 정비 기술용역(이하 "본건용역")을 공급받기로 함
- □□사는 당초 ○○사와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로 잠수함의 구성장비인 추진전동기를 제작하여 ○○사를 통하여 납품하였으며
 - 본건 용역은 기 수입한 잠수함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차원에서 잠수함의 핵심구성품인 추진전동기의 정비를 위해 공급받는 것임

질의

- 정부가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해당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 계약에 따라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 신

정부가 외국 A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해당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A법인의 하청업체인 외국 B법인과 별도로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333, 2021.12.31

■ 질 의

- 서울 소재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 용도변경한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이 기존건물의 취득일인지 또는 용도변경일인지 여부

■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재산-4357, 2022.01.19

■ 질 의

- 2019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음
- 가업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함

질의

- 가업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가업상속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3항 본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내용, 퇴직경위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법인-4818, 2022.01.18

■ 질 의

- A법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의료사업 및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등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
- 한편, 일정한 공익법인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에 사용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가 개정되었음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이자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병원건물이나 의료기기 등 자산 매입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익목적사업이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호우피해 납세자 납부유예 '최장 9개월'... 진행 중 세무조사도 중단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기본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납부를 지원한다.

지난 달 미처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어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 인하... 지방세도 10% 차등 연계 인하된다

정부가 앞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 역시 기존의 납부액 중 10%가 줄어든다.

법인·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도 이와 연계해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2.5%에

서 2.2%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구간부터 4600만원 구간까지 단계별로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수단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를 추가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분할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하도록 한다.

기업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되 과점주주 상세요건은 시행령에 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긴 기업, 8년간 재산세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기업을 옮기면 8년간 재산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기업의 경우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업종을 전환해 인구감소지역에 남은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농어촌공사 관련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특례도 연장한다.

다만, 농지매매사업은 기존 취득세·재산세 각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취득세만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생산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에서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으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 특례도 연장하되 기존 물류단지 시행자에 대해 부여하던 취득세 35%·재산세 35% 감면혜택 중 재산세는 기본 25%로 낮추고 지자체에게 1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동화 실천계획' 내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 특례도 연장·유지한다.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 행정안전부, 2022. 8

I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

- ❖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
 -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 물가 안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
- ❖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 안정적인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환경 구축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보 기반 강화

정책
목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 민생 안정을 뒷받침

기본
방향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 신성장 기술 등
산업 혁신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 물가 인상 요인
완화
▪ 서민·취약계층 지원

▪ 지방세 제도 합리
화
▪ 감면제도 개선

▪ 지방세입 확보 기
반 조성
▪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 주요 개정내용 〉

1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 지원 확대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지역 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內 기업·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 신설
- 농·어업 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연장
-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산업·물류단지 지원 연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연장

2 민생안정 지원

물가 인상
요인 완화

- 공공요금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원 연장
-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관련기관 지원 연장

서민·취약
계층 지원

-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확대

3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제도
합리화

-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
-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개선

감면제도 개선

-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4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 신속한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한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1 경제활력 제고

1.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특례법)

연장 + 재설계

- 기업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을 확대(10%p → 15%p)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기업부설 연구소	대기업, 중견기업	취득세·재산세 35%	신성장· 원 천 기 술 10%p 추가 감면	감면 연장 및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15%p 추가 감면 (현행 대비 +5%p)
	초기중견	※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50%		
		취득세 60%·재산세 50%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기업 지원 확대(특례법)

연장 + 재설계

-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 지역 특화 발전 촉진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벤처기업촉진지구	취득세·재산세 37.5%	취득세 50% 재산세 35% (조례 15%p 추가 可)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특례법)

-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 일몰기한 연장(2년)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100% (40만원 限)	감면 연장 (2년)

2. 지역 경제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 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특례 신설
 -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인구감소 지역	신 설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지역 경작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경영회생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한 한 국농어촌공사 관련 사업 감면 연장 · 확대
-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한국 농어촌 공사	농지매매사업	취득세 · 재산세 50%	취득세 50% 취득세 50% · 재산세 75% 감면 연장
	생산기반시설	취득세 · 재산세 50%	
	농업인 경영회생	취득세 · 재산세 50% (환매 시 취득세 100%)	
	FTA 피해 농민 지원	취득세 50%	
	생활환경정비	취득세 25%	
	농지시장안정	취득세 50%	
농지확대개발 토지		취득세 100%	감면 연장
임업후계자 토지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산업·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특례법)

- 지역별 중점 산업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연장
 - ※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산세 감면율(25~35%)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지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물류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취득세 35% 재산세 25% (조례 10%p 추가 可)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5% (5년 간)	
산업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수도권 外 60%)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 (+ 조례 25% 可) 재산세 35% (수도권 外 75%)	

□ 중소기업 대한 지원 연장(특례법)

- 지역별 중소기업의 교육 · 입주 지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지역 내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화 실천계획' 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교육시설용	취득세 25%	감면 연장
	분양·임대용	취득세·재산세 50%	
지방중소기업센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연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취득세 50% (전통시장의 경우 75%)	감면 연장
협동화 실천계획		취득세 50%·재산세 50%(3년간)	감면 연장

2 민생안정 지원

1. 물가 인상 요인 완화

□ 공공요금 안정 지원 (특례법)

- 교통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
-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지원을 위해 지방공사·공단 감면 연장
 - * 대중교통(시내버스 등), 시설 이용요금, 환경미화(쓰레기봉투료) 등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한국 철도 공사 등	철도여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재산세 50%	감면 연장 및 신설 ※ SR 철도차량 감면 신설 (취득세 25%)
	철도차량	취득세 50% (고속철도 : 25%)	
지방도시철도공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연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연장
	지방공단	취득세·재산세 100%	

□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특례법)

-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재설계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연장
지방농수산물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취득세·재산세 100%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100%	

2. 서민·취약계층 지원

□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특례법)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현행) 약 0.3만개소 ('21년 기준) → (확대) 약 1.1만개소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은 무료·유료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재설계
사회복지시설(무료)	신 설	취득세·재산세 50%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사회복지시설(유료)	신 설	취득세·재산세 25%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확대(특례법)

- (현행) 양육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 사망으로,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 시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 제3자와 공동등록 한 것으로 간주



- (개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적용하여 양육가정 지원 유지
 - ※ 사망자의 자동차가 당초 취득 시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라도,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적용

구분	현 행	개 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공동상속 시	취득세 감면 제외	취득세 면제 적용

3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제도 합리화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 (현행)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 추가 부담**
 -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 중과세율(8%)을 적용한 총세액에서 既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를 모두 합한 세액
- (개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 절차 마련
 -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부과

구분	현 행	개 정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 미처분 ※ 중과세율 적용(8%)	별도 신고 절차 없음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없 음
	납부지연가산세	없 음

□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 (현행)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

- *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조를 준용
- (개선) 간주취득세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상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 (예시) 기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 일부규정 명확화

구분	현 행	개 정
간주취득세 관련 과점주주의 범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 요건 준용 (지방세법 §7⑤)	「지방세법」에서 별도 규정 ※ 향후 간주취득세 성립을 위한 과점주주의 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화

□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 (지방세법)

- 담배를 직접 연구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면제되도록 면제 사유 구체화
- 세금이 납부된 담배가 제조장에 반입되는 경우, 기 납부세액을 공제·환급하고 재반출 시 납세의무가 재성립하도록 규정
 - ※ 유사 제도(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와 과세행정 일원화

구분	현 행	개 정
과세 면제대상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시험분석 또는 연구 목적 구체화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
세금을 납부한 담배가 제조장에 반입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되는 때' 공제·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 → 공제·환급 ▪ 재반출 → 납세의무 재성립

□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지방세법)

- 개인·법인분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법인분 최고세율 인하(2.5%→2.2%)
 - *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와 동일한 과표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의 세율을 적용

구분	현 행		개 정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
	2~200억원	2%	5~200억원	2%
	200~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5%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5,000~8,800만원	2.4%
	8,800만원~	3.5~4.5%	(현행과 같음)	

□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개선(기본법)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구분		현행	개정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납세의무 승계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	민법상 법정상속, 대습상속, 유언에 의한 분할상속	좌동 (추가)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 취득 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 승계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	

2. 감면제도 개선

□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특례법)

- (현행)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 가능하되, 법에서 이미 규정한 감면은 추가 감면 불가*
 - *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 불가(법 §4②1)
- (개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에 더하여 감면대상(물건·부동산 등)을 조례로 추가 가능

참고		개정에 따른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예시	
유형	법 규정	감면적용 예시	
		현행	개선
감면대상 추가 (대상 확대可)	장애인 자동차 감면(§17)	법률에 따라 자동차*만 감면 可 * 취득세, 자동차세	조례를 통해 주택* 등 他물건 지원확대 可 * 취득세, 재산세 등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특례법)

①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추징) 규정 마련

- (현행) 감면대상 분야의 특성상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이 어려운 일부 감면제도에 별도의 추징규정 없음
 - * 1년이내 직접 미사용시 또는 직접사용일부터 2년이내 매각·증여 및 임대 등 he용도 사용시 추징
- (개선) 감면 대상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별도 사후관리 규정* 마련
 -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매사업 부동산) 농업 외 목적 사용, 농업인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추징
(관광단지용 부동산) 단지 조성계획 취소, 준공 해태,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추징
(도시개발사업 상 체비지) 취득 후 1년 이내 분양하여 경비에 종당하지 않는 경우 추징

②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사후관리(추징) 강화

- (현행) 거주요건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매각·증여 시에도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 추징배제 사유를 폭넓게 규정
 - 他 감면규정과의 불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약화 우려
- (개선) 3년 이상 실거주 요건 도입 및 추징 배제사유 축소*
 - * 해외이주, 파견근무 및 부처교류 등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는 추징

4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징수법)

- 납기전 징수 사유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납기전 징수 시점을 국세와 일치





□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기본법)

- 납세자의 신청으로 세무조사가 연기된 경우, 연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 (개시사유)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분		현 행	개 정
세무 조사	조사중지 (자치단체장 직권)	조사재개 가능 ※ 중지사유 소멸 시	(좌동)
	조사연기 (납세자 신청)	연기신청 기간 만료 시까지 조사유예	조사개시 가능 ※ (사유) 연기사유소멸 및 조세채권확보 위해 필요시 ※ 조사개시 5일전 통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부과금법)

- (현행) 계약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 (개선) 국가·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도 제출토록 확대

2.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기본법)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처분당사자'에서 '이해관계인'까지 확대
 - ※ 지방세입 관계법을 운영예규 규정 사항을 기본법으로 상향 입법
 -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을 포함
 - * 청산인 등(기본법§45), 출자자(기본법§46), 법인(기본법§47), 사업양수인(기본법§48)
 - ** 신탁재산 수탁자(지방세법§119의2), 양도담보권자(기본법§75), 중증(기본법§75)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세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당사자	(추가) 이해관계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기본법)

-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해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경정청구 가능

구분	현 행	개 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판결	(추가)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

□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징수법)

- 지방세 납부방법 관련 현행 신용카드, 자동계좌이체, 현금, 증권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를 추가하여 운영 활성화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세 납부방법	1. 현금(계좌이체포함) 2. 증권 3. 신용카드	(추가) 3-1. 직불카드 4. 통신과금서비스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지방세법)

-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구분	현 행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신 설>	종합소득분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시행령 위임
분납기간	<신 설>	2개월 이내

※ 양도소득분과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국세 대비 각각 +2개월, +1개월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납부이연 효과가 발생하므로 분납규정 미운영

III

추진일정

- (대상 법률: 총 5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향후 일정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발표 : 8월 11일(목)
- 입법예고(20일간) : 8월 12일(금) ~ 9월 1일(월)
- 차관회의 : 9월 22일(목)
- 국무회의 : 9월 27일(화)
- 국회 제출 : 9월 말경

참고 - '22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내용

1

지방세기본법

※ □ : 주요 개정내용(본문내용과 동일)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 과세 	
④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척기간 규정 	국세 동반
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국세 일치
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에 따른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국세 동반
⑦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26년 과세기간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 	국세 동반
⑧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세액 충당 후 양도 	국세 일치
⑨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국세 일치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⑩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84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된 조사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사유 등 ** 탈루 혐의가 여러기간, 세목까지 관련되는 경우 등 	국세 일치
⑪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확대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중증 	국세 일치
⑫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 명확화(\$91)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	국세 동반
⑬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96)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	국세 동반
⑭ 포상금의 지급 관련 인용조문 정정(\$147)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⑮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추가 * 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 시가인정액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 - (현행) 강제집행을 받을 때 → (개선)「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 	국세 일치
②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2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증권,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핸드폰 소액결제) 납부방법 확대 	국세 일치
③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24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정보통신망) - 공매등대행기관(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 동반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④ 징수유예사유 조문정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유 구체적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재해도난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 - 장기치료 →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喪中) 	
⑤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 주체 확대(\$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자산의 공매를 위해 감정인이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현황조사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출입 및 체납자·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 요구 권한 명시 - 단, 현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 	국세 일치
⑥ 타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용어정비(\$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용어의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법제처 권고
⑦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 7일(공휴일 등 제외)로 연장 	국세 동반
⑧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신설(\$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정 신설 ※ 공매,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등에게 매각사실 통지 	국세 동반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을 인용하였으나,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동반개정 	
②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를 과세대상별*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토지, 토지의 지목변경 ○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원인을 승계취득으로 명확화 ○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 	
③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 법인(또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일괄 유상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원인(유·무상)을 명시적 규정 없이 판례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용 중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④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하도록 개정 -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⑤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의 과세면제 보완(\$54,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으로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과세면제 사유 구체화 																
⑥ 담배 재반입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53,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소비세가 납부된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면 세액을 공제·환급하고, 재반출 시 납세의무가 다시 성립하도록 규정 ※ '미납세반출'을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반출되는 경우로 정의한 유사 반출과세제도(개별소비세 등)와 조세행정 일치 																
⑦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방식 적용범위 확대(\$85, \$103의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범위 확대(모회사 지분율 100% → 90% 이상)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 	국세 동반 '24년 시행															
⑧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위 2개 구간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td>1,400만원 이하</td><td>0.6%</td></tr> <tr> <td>1,200~4,600만원</td><td>1,400~5,000만원</td><td>1.5%</td></tr> <tr> <td>4,600~8,800만원</td><td>5,000~8,800만원</td><td>2.4%</td></tr> <tr> <td>8,800만원~</td><td>(현행과 같음)</td><td>3.5~4.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5,000~8,800만원	2.4%	8,800만원~	(현행과 같음)	3.5~4.5%	국세 동반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5,000~8,800만원	2.4%															
8,800만원~	(현행과 같음)	3.5~4.5%															
⑨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 ※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 	국세 동반															
⑩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⑪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102조의2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주식·채권 등)의 양도·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신설)'으로 분류하여 과세 	국세 일치 '25년 시행															
⑫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의 과세기준 완화(\$103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서 같은 법상의 '고액주주'(지분율 무관,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로 변경 	국세 동반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⑬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개선(\$103의19, \$103의34)	◦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그 법인의 외국법인세액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 (국세)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 기존간접투자회사가 환급신청 → 변경투자자가 공제				'25년 시행	
⑭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103의20)	◦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세표준 구간 단축(4→2~3단계)				국세 동반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2~200억원		2%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	2%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⑮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103의31)	◦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 제도 신설					
⑯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103의32)	◦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면제(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 주식, 토지·건물, 회원권 등				국세 일치	
⑰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부칙 \$1)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23년→'25년)				국세 동반	
⑱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부칙 \$12)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구 균등분)에 대한 가산세* 특례(면제) 적용기한을 '23년까지 1년 연장 *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직접 사용' 개념 명확화(\$2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대상 '직접 사용' 범위에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도록 총칙규정에 명확화 ※ 총칙 규정(\$2①) "임대는 제외" 명문화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②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 * (법) 장애인 자동차 감면 → (조례) 장애인 주택 감면 可 	
③ 한국농어촌공사 사후관리 규정 마련(\$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매매사업* 등 해당 공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추징규정** 마련 *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매도 ** 농업외 용도로 사용, 농업인 외의 자에게 매각 등 	
④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 합리성 제고(\$22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 양육자 사망시, 그 배우자 자녀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토록 요건 완화 ※ (現)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등록 시에만 감면 可 	
⑤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보완 	
⑥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 사후 관리 규정 마련(\$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개발절차 및 기간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추징규정* 마련 * 단지 조성계획이 취소되거나, 준공 해태, 목적외 사용 등 	
⑦ 지식산업센터 사후관리 규정 강화(\$58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자의 사업 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 등을 고려, 유형별로 추징규정* 보완 * (현행) 매각·증여·他用도 사용 → (개선) 분양 : 未분양, 임대 : 未임대, 직접 사용 : 매각·증여 등 	
⑧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71, \$75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 단순 정비* * (\$71) 민간투자법 제2조5호 → 제2조제6호 등 (\$75의3) 국가균형발전법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74, \$177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특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조세체계에 맞도록 지방세법으로 이관 	
⑩ 개발사업 시행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경비에 충당을 위해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징규정* 신설 * 체비지를 사업경비에 충당하지 않는 경우 	
⑪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취득 후 실거주 의무요건을 신설하고, 추징이 배제되는 예외사유 축소·정비* * (현행) 사망, 혼인, 정년퇴직,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 (개선) 사망, 혼인, 정년퇴직 限 	
⑫ 중복감면 배제 규정 체계 정비(\$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던 '중복 감면' 용어를 '중복 특례*'로 명확화 * 「지특법」 \$2에서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으로 특례의 정의 규정 중 '세목별'로 유리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7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제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만 제출하도록 규정 	
② 제3자의 납부 근거 마련 (§7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 편의성 향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3자 납부 규정 신설 	지방세 일치
③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 (§9의3, §9의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강제징수 진행 중 체납자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도록 직접 규정* * 현재 「국세징수법」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준용 	
④ 고액·상습체납자 수입 물품 체납처분 위탁근거 신설 (§18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⑤ 체납처분 적용범위 및 법 해석의 명확화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징수법」의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하여 준용 규정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징수공무원'으로, '국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 적용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

I

경제활력 제고

1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특례법)

① 신성장·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확대하는 이유?

-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기업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
-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의 경우 감면을 추가 확대
- ※ (신성장·원천기술)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7)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 지원 확대 (특례법)

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 벤처기업은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잠재력 높음
- 지역별 특화지구 조성 등 벤처기업 유치 노력 장려하기 위하여, 지자체 감면 자율성을 부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上 '육성촉진지구' >

- (개념)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 (절차) 시·도지사 요청 시 중기부 장관이 기반시설 등 고려하여 선정·지정
- (현황) 전국 26개 지구
 - 서울 3, 경기 5, 인천 1, 부산 2, 대구 2, 광주 2, 대전 1, 울산 1, 강원 2,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2, 경남 1, 제주 1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①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3년이 아닌 2년 연장하는 이유?

-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가 정책 기조와 연계될 필요
 -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4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향후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24년 정기개정 시 재검토
 - *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22.2월)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5.1.1.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

② 지역 경제 활성화

1.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① 인구감소지역이란?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시·군·구)으로서, 출생률·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등
- '21년 10월, 지자체·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9개 지역이 지정·고시된 바 있음

②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이유?

-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제고하기 위한 것임
- 최근 국세도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7.21. 발표)
 - * 10년 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2년 간 50% 감면(광역시 외 인구감소지역)
- 기존 유사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을 설정
 - * 현재 과밀억제권역(산단 제외)에서 지방으로 본점·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5년 간 100% 감면, 이후 3년 간 50% 감면) 등 지방세를 면제 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80조)

2. 산업·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③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물류단지 육성을 지원하고
 - 교통체증, 소음 등 물류단지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II

민생안정 지원

I 물가 인상 요인 완화

1. 공공요금 안정 지원(특례법)

① 한국철도공사 감면 연장 및 SR 감면 신설 이유?

- 철도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등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국철도공사 감면을 연장하고 SR에 대한 감면 신설
 - 또한, SR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 철도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특례법)

①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 공사에 대한감면 연장 이유?

- 6.19.일 발표된 「당면 민생 물가안정대책」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를 통한 농산물 긴급 수입 등이 포함되는 등,
 - 해당 공사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임
- 최근 곡물가 상승 등 고려 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해당 공사 지방세 지원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 활성화 촉진 필요



Ⅱ 서민·취약계층 지원

1.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특례법)

① 사회복지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

- 사회가 복잡 · 다변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또한 다양화 · 세분화되는 경향
-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② 사회복지시설 간 감면율을 차등 설계하는 이유?

- 무료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보장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점 등 감안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기관 등
- 한편,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공익성 등 고려하여 조례로 취득세 · 재산세를 최대 50%p 추가 감면 가능하도록 설계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Ⅰ 지방세 제도 합리화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①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유는?

- 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취지에 맞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선하는 것임
 - * 일반적으로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을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없음(법820③)
 - ※ (사례)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 공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2.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

- 현행 간주취득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개념은 「지방세기본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나,
 - 간주취득세 제도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목적이 달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개념을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지방세법)

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취지는?

-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음
 - 또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음
 - * (소득세) 6~45% → (개인지방소득세) 0.6~4.5%
 - (법인세) 10~25% → (법인지방소득세) 1~2.5%(최고세율은 현행법 기준)
-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할 계획임
 - 서민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폭으로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것임

4.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지방세법)

① 과세 면제 구체화로 면제 대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 현행 규정이 담배를 직접 연구하지 않는 시험분석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예: 자동차 화재실험에 담배가 사용되는 경우 등)까지 과세가 면제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면제 사유를 구체화*한 것임
 - * 담배의 품질개선, 신제품개발, 성능인증, 성분분석 등



5.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개선 (지방세기본법)

①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수유자*상속포기자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뿐만 아니라,
 -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 *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
- **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총액 - (상속부채총액 + 상속세액 및 취득세)

② 감면제도 개선

1.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특례법)

①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

-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 지역특화산업 유치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조세 감면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
- '20년 결산 기준 조례 감면액이 총 감면액의 약 5.4%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활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 * 총 감면액 6조 2,740억원 중 법정 감면 5조 9,353억원(94.6%), 조례 감면 3,387억원(5.4%)
- 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방세 지출 정책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특례법)

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문 필요한 이유?

- 지방세 감면은 법률상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따라서, 당초 감면목적에 위배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②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배경은?

- 특별공급 제도 등과 관련,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근무지 변경 후 매각하는 사례 등 발생
- 실거주 요건 도입 및 추정 사유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할 필요

③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달라지는 점은?

- '23. 1. 1.이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 사망, 혼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이상 상시 거주 의무 발생
 - 위반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

IV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1.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 (징수법)

① 강제집행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를 개정하는 이유?

- 국세의 경우, 납기 전 징수사유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등이 시작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규정
- 반면, 지방세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 납기 전 징수 시점이 국세보다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국세와 동일하게 납기 전 징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②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은 없는지?

-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 받은 자의 남은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 자치단체가 납기전 징수사유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음
- 납기전 징수를 통해 지방세 채권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파산된 체납자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청산한 후에도 지방세 체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 청산 후 다른 부채 등은 탕감될 수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은 감액되지 않음

2.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기본법)

③ 세무조사 개시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 천재지변이나 화재·질병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중으로,
- 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토록 개정하여 지방 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부과금법)

④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이유?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납부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있더라도 대금 수령이 가능함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제출
-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확대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에 기여

②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기본법)

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처분 당사자' 외에도 '이해관계인'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

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토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익 신장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기본법)

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이유는?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토록 정하고 있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신장

3.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징수법)

③ 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를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추가한 이유?

- 직불카드의 경우 현재도 위택스, 은행 ATM기,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 일부 자치단체(경기, 부산 등)에서 납부편의 시책의 하나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납부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완하고자 함.

④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는?

- 현금(계좌이체 포함), 신용카드, 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함
 -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수표, 우편소액환증서 등

⑤ 납부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을 추가할 계획은 있는지?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 전자지급수단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납부수단 확충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
- 결제수수료, 이용금액 한도 등의 문제와 선불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예탁금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이후, 안정성 확보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초래
- 개인지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②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도입하는 이유는?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양도소득세·법인세)보다 신고·납부 기한*이 길어 납세자 부담이 적은 반면,
 -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2개월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납부기한 +1개월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기간(5.1.~5.31.)이 소득세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달리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11일(목)	8월 12일(금)	8월 16일(화)	8월 17일(수)	8월 18일(목)
미 달 러 (USD)	1309.10	1302.50	1303.10	1309.60	1309.80
일 본 엔 (JPY)	985.29	979.21	979.22	975.46	969.32
영 국 파 운 드 (GBP)	1599.26	1588.66	1571.08	1584.62	1578.24
캐 나 다 달 러 (CAD)	1024.78	1020.25	1009.65	1019.66	1014.13
홍 콩 달 러 (HKD)	166.84	166.06	166.26	167.01	167.00
위 안 화 (CNH)	193.55	193.28	193.31	192.58	192.92
유 로 화 (EUR)	1348.57	1344.51	1324.34	1332.13	1332.98
호 주 달 러 (AUD)	927.43	924.91	914.91	919.73	908.22
싱 가 폴 달 러 (SGD)	956.35	950.76	945.41	949.95	948.0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3.72	293.03	292.21	293.24	293.15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 · 행정안전부, 2022. 8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지난 7.25.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 22.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습니다.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참고 2 -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

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파,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참고 3 -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채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4 -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마련

-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채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 금융위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과 협력하여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하여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하여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해피해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개요》

- ◆ 8.9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 금융업권협회·중앙회 등으로 구성, 피해상황 점검 및 금융지원 대응 총괄·조정 중
- ◆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상담·안내
 - * 신청 시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지참 필요